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참고자료**	평창

2017. 10. 19(목) 23:30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7. 10. 19 (목) 23:00	담당부서	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 외교부 북미유럽경제외교과
담당과장	이진광 과장 (044-203-4340) 김기준 과장 (044-203-5680) 류호권 과장 (02-2100-7684)	담 당 자	방규철 사무관(044-203-4343) 천서현 사무관(044-203-5685) 김가윤 사무관(02-2100-7690)

정부·업계, 미국 국제무역위원회(ITC) 세탁기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판정에 적극 대응

- 10.19.(목) 국제무역위원회(ITC)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 참석 -
- 미국 내 우호세력 및 타국 정부 대표단과도 공동 대응 -

□ 우리 정부와 업계는 10.19(목) 미국 국제무역위원회(ITC)에서 개최된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(세이프가드) 구제조치 공청회에 참석해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밝혔다.

※ 산업부 통상협력국 심의관,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(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) 등 산업부 및 외교부 관계관 참석

※ 미국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(세이프가드: SG) 제소건 개요
- (제소자) 미국 월풀(Whirlpool)사
- (대상품목) 대형가정용세탁기(24.4~32인치, 한국 기준 13~30kg) 및 주요 부품
- (진행경과) 5.31 조사 요청(제소) → 6.5 조사 개시 → 9.7 산업피해 공청회 → 10.5 산업피해 판정 → 10.19 구제조치 공청회

o 특히 10.5. 국제무역위원회(ITC) 산업피해 판정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한국산 제품은 규제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,

- 미국 기업 세탁기와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없는 최고급 제품 및 세탁기 부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지적하며,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.

o 아울러, 월풀이 주장하는 50%의 고율관세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한하여(only to the extent necessary) 구제조치를 채택할 것을 규정한 세계무역기구(WTO) 보호무역조치(세이프가드) 협정에 위반한다고 강조했다.

※ 월풀 주장 : 세탁기 및 부품에 3년간 고율관세 부과(1차년도 50%, 2차년도 49%, 3차년도 48%), 부품은 수입쿼터(3년 평균 수입량) 추가 부과 등

□ 이번 공청회에는 헨리 맥마스터(Henry McMaster) 사우스캐롤라이주 주지사, 랠프 노만(Ralph Norman) 연방 하원의원, 밥 롤페(Bob Rolfe) 테네시주 상공부장관 장관 등 미국 인사도 참석해,

○ 고율관세 부과는 세탁기 수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삼성 및 엘지(LG)의 기존 유통망 상실, 브랜드 인지도 저하 등을 초래하고,

- 이는 결국 삼성과 엘지(LG)가 건설 중인 미국 현지 공장이 추후 가동해도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긴급수입제한조치(세이프가드) 반대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.

※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3.8억 달러 투자, 18년초부터 가동 예정
엘지(LG)전자는 테네시주에 2.5억 달러 투자, 19년 중 세탁기 생산 공장 가동 예정

□ 한편 우리 기업 공장이 위치한 베트남 등 외국 정부 인사도 참석, 긴급수입제한조치(세이프가드)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했다.

□ 그간 정부는 업계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△정부 서면의견서(8.29, 10.12) 제출 및 △제1·2차 공청회 참석(9.7, 10.19) 등 긴급수입제한조치(세이프가드) 조사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왔으며, 앞으로도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.

※ 향후 일정: 국제무역위원회(ITC), 구제조치 판정(11.21) → 국제무역위원회, 미 대통령 앞 보고(12.4) → 60일 이내 대통령 구제조치 결정·시행 예정

o 특히 세계무역기구(WTO) 세이프가드위원회(10.23, 제네바)에서도 세탁기, 태양광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개진하고, 사우스캐롤라이나, 테네시 주정부 및 의회 관계자, 베트남 정부 등 우호세력과의 공조를 지속적으로 유지·강화하기로 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방규철 사무관(☎ 044-203-4343), 천서현 사무관(☎ 044-203-5685), 외교부 김가윤 사무관(☎ 02-2100-769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